

종합

“5·18은 민중반란” 진실화해위원장 막말 파문

‘4·3은 폭동’ 폄훼 ... 5월단체, 이영조 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제학술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1988년 이후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제주 4·3사건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999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4개 5월 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5·18이 반란이라면 그 반란을 기념하는 국가와 대통령은 무엇인가. 정치학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사교방식과 역사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편협한 역사관식을 가진 사람

이 어떻게 우리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규명하고 정리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희대 교수를 지냈다. 뉴라이트 성향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시설

광주시의회, 집행부 견제 고삐 더 조여야

민선 5기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마무리됐다. 열흘 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의원들 대다수가 초선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함께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부랑인 관리 허점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제1망월 묘지 위탁업체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기관은 의원들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또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와 관급자제 계약 특혜의

혹 등 그동안 ‘섬역’으로 여겨졌던 사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도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적인 문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언론 보도에 집착해 부실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초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초심(初心)이 4년 동안 변치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 민선 4기 온갖 부정과 부패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의원들이 40% 이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 돼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보다 방관 내지 동조로 일관한 게 그 같은 사태를 키운 것이다.

의원들이 다시금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대거 갈아치운 것처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 지사의 ‘SOC 소외-전남낙후’ 악순환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전남 소외’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지사가 18일 ‘광양항 배후 수송 시설 준공식’ 행사에서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전남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기업들은 SOC 시설이 없다고 전남을 기피하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전남에 SOC를 건설하지 않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발언한 것이다.

박 지사가 이날 광양항 배후수송망 완공 기념식에서 ‘전남 홀대론’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2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점을 감안하면 계산된 발언인 듯하다.

박 지사는 우선 2012 여수박람회와 성공개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사업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겨냥했을 것이다. 또

한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F1 대회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도 묻어 있다.

박 지사의 이날 발언은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백만 번의 말이다. 박 지사가 밝혔듯이 도로와 철도, 항만 등과 같은 SOC 시설이 없으면 그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인데 그 단적인 사례가 전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수엑스포와 F1 대회, J프로젝트 등 광주·전남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내년 F1 조직위 주도로 치르겠다”

주동식 본부장 “KAVO 기능 대폭 축소”

F1(포뮬러) 국제자동차대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내년 F1 대회를 현재 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아닌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KAVO의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이는 올해 F1 대회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소동 부재까지 겹치면서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주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19일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보고를 발표하면서 “내년 F1대회부터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도해 준비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특히 “올해 대회는 대회운영법인인 카보가 대회개최 준비 및 운영을 맡고 조직위가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내년

부터는 조직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원회 내에 마케팅·대회 운영 기능 등을 신설해 운영과 입장권 판매·스폰서십 유치 등 수익사업과 마케팅 프로모션을 주도하면서 개최 및 운영 비용을 직접 조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앞서 간부회의에서 더 이상 KAVO에 맡겨두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경주장 건설 문제가 없어지는 만큼 관공객 유치 및 마케팅(기업 스폰서십 유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언급한 뒤 이어진 후속조치인 셈이다.

KAVO의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 KAVO는 필요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두고 슬림화하겠다는 것으로 주 본부장은 “민자 조달의 수단이나 각종 계약관계 등의 형식적 주체로 역할을 국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제방 나무심기

19일 오후 영산강 5공구 승촌보 인근 영산강변에서 김일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임성훈 나무심기(“네번째”), 지역주민들이 느티나무·갈참나무·산철쭉 등 4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영산강 전 구간의 제방과 고수부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나무심기 등 영산강수변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벌인다. <익산국토청 제공>

‘돈 먹는 하마’ F1, 올해 677억 적자

전남도의회 F1 감사

올해 F1(포뮬러) 국제자동차대회는 ‘돈 먹는 하마’였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한 차례 대회로만 677억원의 적자를 냈고 경주장 건설비용도 당초보다 102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의회가 18일 전남도 F1 대회지원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F1 경주장 건설비용은 애초 추정했던 3400억원보다 1025억원이 증액된 4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당초 경주장 설계에 비해 ▲트랙 안전시설(360억원) ▲가설스탠드 설치(200억) ▲특수전자차비 5개 공종(73억) 등 공사비가 633억원 증액됐다. 이들 시설은 경주장 건설에 필수적 시설

공사비 1025억 증액 ... 중계권료 132억 손실

설계·공사비 엉터리 산정 등 감독 부실 질타

인데도, 주먹구구식 설계에 따라 공사비를 엉터리로 산정하는가 하면, 가설스탠드나 특수전자차비 공종은 애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심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철환(여수 6·민주) 의원은 “F1 경주장 설계만 수차례 해온 팀씨가 기본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누락했고 심사·감독 기능을 맡은 전남도와 KAVO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욱기(나주·민주) 의원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전남도는 대체 위한 것이냐,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FIA·FOM이 트럭광고판(20억)·TV 롬파운드(10억)·FOM 방송센터(7억)·한식육교(25억)·벤딩 에어리어 펜스(18억) 등의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110억원이 들어갔고 경주장 편의시설 개선(84억)·법정부담금(198억) 등도 추가로 들어갔다.

전남도는 1025억원 가운데 국비 308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추가 부분은 주주사들이 부담한다는 계획이지

만 주주들이 투자를 망설일 경우 도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야할 처지다.

경주장 건설 외에 지출도 842억원에 이른다. 대회개최권료로 360억원을 지급했고, FOM에 147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중계권을 사온 뒤 국내 방송사에 판매해 거둬들인 중계권료는 1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국내 TV중계권료 협상과정에서 132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운영비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이의 수입도 형편없었다. 당초 740억원을 예상했던 수입은 실제로는 165억원에 그쳤다. 부실한 마케팅과 홍보로 입장권 및 스폰서·기업부스(SKY BOX) 판매수익은 ‘참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677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내달초 본회의 표결...北 반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에 비해 찬성국이 6개국 더 많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

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내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6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태훈 차석 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광대 총장에 정세현씨

전북 익산 원광대의 차기 총장에 정세현(65) 전 통일부 장관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의(이사장 이성택)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원광대 제 11대 총장으로 정 전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차기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3일부터 4년이다.

정 전 장관은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통일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원장특별보좌역, 통일부 장관, 민주화해협력한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거쳐 현재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빛의만평

- 김중두

뭘 좀 알고나 저러는지... 원...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파행

야당 의원들 '검찰총장 출석 요구' 의장석 점거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는 야당의 단독 질의 강행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의장석 점거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정책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하며 실력행사에 나서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위원장이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를 강행하자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포폰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든 채 의장석 주위를 둘러싸고 '회의를 중단하라'고 항의, 정회가 선언됐다.

이날 오후, 이주영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항의와 상호 비방성 의사행발, 막말, 고성 등이 영키면서 다시 정회가 선언됐다.

민주당 서갑원 예결위 간사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돼야 거기에 맞춰 공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심의해 내년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회의의 강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참조한 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민간인 사람사건 수사와 검찰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